



남장판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18일 민주당의 한 당원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 진입하기 위해 멧치로 바리케이드를 내리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무법의 전당’

여, 문 걸어잠근 채 한미FTA비준안 단독상정 야, 망치 등으로 회의장 문 부수며 강력 반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8일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18대 국회 첫 질서유지권 발동, 한나라당의 회의장 문 봉쇄와 기습 상정, 망치 등을 동원한 민주당의 회의장 출입문 파손, 전기톱과 분말소화기의 등장, 격렬한 싸움, 막말과 고성 등 무법천지의 구태가 연출됐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단독 상정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급랭된 연말 정국을 한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대립으로 이끌었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의 상임위 거부로 나흘째 공전을 거듭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박진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비준 동의안의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계속 저지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 2~3 초 만에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 위원장과 정몽준·남경필·정진석·황진하·김충환·이춘식·정욱인·구상찬·홍정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비준 동의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정되자 야권은 “의회 민주주의의 유린”,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규탄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의회위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군사독재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브리

핑에서 “회의 시간으로 통보된 오후 2시 정각에는 이미 상정이 끝난 뒤였으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에서 “비준 동의안은 예정대로 연말까지 처리할 것”이라며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국회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상도 구동회기자 sdoh@seoul.co.kr
▶ 관련기사 3면

車소비세 오늘부터 30% 인하

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후순위채 등 매입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한다. 중형차 ‘쏘나타’의 경우 소비세가 40만원 줄어든다.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가 내년 1월 말 폐지돼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가 사라진다. 대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다른 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은행들의 자본금을 늘려주기 위한 20조원 규모의 펀드도 한시적으로 조성된다. 한국은행이 11년 만에 ‘비상사태’에 만 쓸 수 있는 직접 대출 방식을 동원, 절반인 10조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세제 지원을 하기로 하고,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30% 낮춰 내수 판매를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00~2000cc 이하 승용차는 세율이 5%에서 3.5%로, 2000cc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7%로 각각 내려간다.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S16 럭셔리)’는 1553만원에서 약 30만원 내려간 1524만원으로, 중형세단 ‘쏘나타(N20 트랜스폼)’는 2115만원으로 약 40만원이 인하된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 내역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제도도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다. 이 제도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입

3개 부처 내년 주요 업무계획

- 승용차 개별소비세 19일부터 6개월간 30% 인하
- 접대비 실명제 1월말 폐지
- 20조원 규모 은행권 자본확충펀드(가칭) 조성(한은 10조원 대출)
- 은행들, 중소기업에 50조원 공급
- 9억원 이하 1가구주택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정부 보증
- 금융공기업, 2500명 청년인턴 채용
- 대기업이 사모펀드 통해 다른 기업 자유롭게 인수
-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법 개정안 내년 3월 국회 제출)
- 부가세·양도세도 합금 추진

증할 수 있도록 접대일자와 금액, 접대장소, 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성명, 접대 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2004년 도입됐다. 금융위는 한은 대출 10조원, 기

관 및 일반투자자금 8조원, 산업은행 출자금 2조원으로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펀드(가칭)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은이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 대출을 하는 것은 외환위기로 초단기 자금(플) 시장이 마비됐던 199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현재 상황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1월 말까지 은행들로 하여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기본자본비율 9%)를 맞추도록 자구노력 시한을 주되, 이를 맞추지 못하는 은행에는 펀드에서 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이현 김태국기자 hyun@seoul.co.kr ▶ 2면에 계속
관련기사 4·5·6·18면

李대통령 “일하다 한 실수 정부가 책임”

이명박(열굴) 대통령은 18일 “일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면서 하다가 실수하는 공직자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면서 “공직자들이(위기 극복의)선봉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는 공직자를 바라는 게 아니다.”며 “공직자가 일하지 않으면 실수도 하지 않는 것이기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부지리를 얻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공직자들이 경제위기 대처과정에서 ‘실수와 책임’을 두려워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점을 의식, 정부가 앞장서 그런 결심들을 제거해 줄 테니 공직자들은 전향적 사고로 위기대처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제정 ‘1급 전원사표’로 촉발된 연말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인사쇄신 분위기와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하다 실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여러분이 선봉에 서지 않으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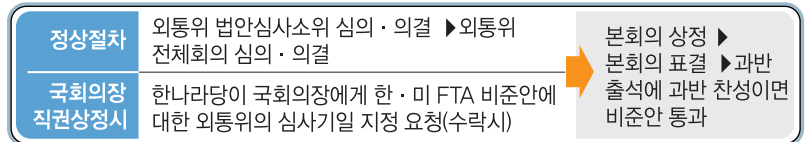
도 그렇고 기회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공직자들이 이번 위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자세를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위기 때 어려운 중 몇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정책을 잘 쓰면 서민과 신빈곤층, 중소기업 등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각기자 jrlee@seoul.co.kr
▶ 관련기사 6·8면

한·미 FTA 진행 절차



‘식물위원회’ 없앤다더니 되레 신설 추진

근거法 없이 100억 예산 배정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 폐지를 전명한 현 정부가 근거법령도 없이 정부위원회 설치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도 일부만 삭감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반죽을 사고 있다. 문제의 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예산을 편성한 사회통합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을 준비 중인 국가브랜드위원회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조직, 업무와 중복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산비효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후 정부위원회가 난립해 국정운영에 장애가 많았다. 지난 5월 “정부위원회를 절반 이상 줄인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 예정인 사회통합위원회는 그 취지를 대한민국 공동체의 사회통합 비전과 목

표, 사회적 연대식을 고취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22억 7000만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관련 규정도 없이 예산부터 책정한 점이다. 지난 8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소위원회는 간신히 ‘연말까지 대통령령을 만든다.’는 조건을 달아 원안에서 10% 감액된 20억 4300만원으로 수정해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하려는 국가브랜드위원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문화부는 “과거적인 국가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8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위원회 기능이 기존 조직과 겹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Yonsei, the First & the Best

학생들과 호흡하는 대학, 연세대학교

따뜻한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 50만 연세가족이 함께합니다.

- 장학금 지급총액 국내 대학 1위
- 현, 이공계 정원 40% 전액장학금 지원 중
- 경영계열 2009학년도 정시모집 장학제도 우선선발 합격자 전원 4년 전액장학금 지급
- 일반선발 최초합격자 전원 장학금 지급 (상위 10% 4년 전액장학금, 나머지 90% 1년 전액장학금)

2009학년도 연세대학교 정시 모집

· 입학원서 접수: 2008. 12. 20(화) 10:00 ~ 12. 23(목) 17:00
· 수능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 2008. 12. 31(수) 17:00
· 논술시험: 2009. 1. 3(토) 인문계 09:30 ~ 12:30
· 합격자 발표: 2009. 1. 24(토) 17:00

▶ 입학상담실 | 서울 02)2123-4131, 광주 033)760-2828
* 자세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admission.yonsei.ac.kr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양도세 한시면제 추진

姜재정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반대 안해”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조만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과 맞물려 자칫 경기 회복 시점에 집값 폭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건설업계의 건의를 수용, 빠른 시일 안에 한시적 양도세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정 기간 주택을 산 사람들에게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는 지난 1998년 5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시행됐고, 이에 따라 당시 최고가 아파트였던 태워팰리스 등의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던 강남 3구 투기지역 완화 역시 양도세 면제 부장관의 지지 입장 표명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 장관은 이날 “지금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 자산 디플레이션(자산규모 감소)을 걱정해야 할 때”라면서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관련 대책을 책임지고 만들어 보라고 했고,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준비 중인 투기지역 해제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정책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관련 규제가 풀리면 아파트를 살 때 적용받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에 각종 부동산 규제 해제뿐만 아니라 양도세 면제까지 거론되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특혜 시비는 물론, ‘강부자 장권이 강남 집값 상승을 위해 향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동수 재정부 1차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재정조기 집행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적자국채를 조기에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길기자 douzil@seoul.co.kr

보험중개사 합격자 공고 6면